

【 주간이슈 】

금융보호주의의 파급효과와 한국의 대응방안

신종협 부연구위원

황진태 부연구위원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타적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금융보호주의라 지칭함.
- 일부 선진국들의 배타적 금융정책으로 최근 급격히 금융보호주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음.
 - 일부 선진국들은 금융기관을 국유화한 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이들 금융기관을 통제함.
 - 또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 조건으로 국내경제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강요함.
 -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하여 선진국들의 해외자금시장 장악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금융보호주의의 확산이 신흥국들로 하여금 해외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음.
 - 금융보호주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 및 여타 부문으로까지 확산되어 중국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실물거래 위축을 초래하여 세계경제 동반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음.
 -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방해하여 외환시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금융보호주의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가간 이해상충으로 국제적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
 - 국가간 공조를 통한 금융보호주의 방지
 - 금융감독 제도의 개편을 통한 시장의 신뢰회복
 - 바이 로컬(buy local) 조항의 제한
- 금융보호주의 확산방지와 한국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대외적으로 신흥국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국내경제 보호를 고려해야 함.
 - G20 정상회의 등에서 신흥국가들과 적극적 협력관계 구축
 - 안정적 해외자금조달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교류채널 확보
 - 금융시스템 정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펀더멘털 강화

본고는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무관한 작성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1. 글로벌 금융보호주의 추세

가. 금융보호주의에 대한 논의

- 포괄적 의미의 금융보호주의는 개별 국가가 가용한 금융수단을 사용하여 자국민과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주변 국가와의 금융 및 실물 거래를 저해하고 세계경제 발전을 지연시키는 행위 일체로 정의될 수 있음.
 - 협의적 의미의 금융보호주의는 개별 국가가 국내 금융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 자국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는 금융보호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는 국가간 자본이동 감소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공정 교역 행위의 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금융보호주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함.

나. 금융보호주의의 확산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은 세계경제 회복을 도외시한 채 자국 경제만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각종 정책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배타적 금융정책을 통한 국내경기 부양 노력으로 일명 금융보호주의로 지칭됨.
 -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에 따른 대외거래 감소, 실물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8년 4/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상승을 경험하고 있음.
 - 이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 금융보호주의의 직접적 영향 중 하나로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은행이 해외대출을 억제함에 따라 국제 자본거래가 감소하고 신흥시장으로 자본유입이 줄어드는 현상을 들 수 있음.
-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 내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책입안과 정치적 압력 등을 통해 해외대출 억제, 국내대출 확대, 자국 산업 보호, 자국 노동자 보호 등을 암암리에 강요하고 있음.

- 과거보다 강력해진 WTO의 제재기능과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 확대로 인해 일부 선진국들이 직접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금융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금융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제재수단 및 제재기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표 1> 신흥시장으로의 민간자본 순유입 추이

(단위: 억 달러)

		2006	2007	2008 ¹⁾	2009 ²⁾
민간자본 순유입		5,649	9,286	4,658	1,653
지역별	남미	515	1836	890	431
	유럽	2,263	3,928	2,542	302
	아프리카/중동	283	374	264	272
	아시아	2,589	3,148	962	649
유형별	지분투자	2,223	2,961	1,741	1,948
	직접투자	1,709	3,041	2,634	1,975
	포트폴리오투자	515	-80	-893	-27
	민간대출	3,426	6,324	2,917	-295
	상업은행 비은행	2,119 1,307	4,103 2,222	1,666 1,251	-606 311

주: 1) 추정치, 2) 전망치

자료: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보호주의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2009년 1월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참여국들은 금융보호주의를 경계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 일치를 봄.

- 1930년대 대공황 시절 금융시장 붕괴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결과적으로 대공황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금융보호주의 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들은 실제 자국에서 금융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금융보호주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금융보호주의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금융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적 규제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일부 선진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금융보호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2. 금융보호주의의 부각 원인

가. 국유화를 통한 금융기관 통제

-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실화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국유화한 다음 이들 기관을 해당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배타적인 금융보호주의 성향이 발생할 수 있음.

<표 2>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실태

국 가	금융기관	국유화 시기	국유화 및 공적자금 투입 내용
미 국	Fannie Mae, Freddie Mac	2008. 9	· 2008년 9월 공적자금 투입으로 2,000억 달러 우선주 매입 · 2009년 2월 우선주 매입한도를 총 4,000억 달러로 확대
	Citigroup	2009. 2	· 2008년 10월 250억 달러 우선주 매입 · 2008년 11월 200억 달러 우선주 추가 매입 · 2009년 2월 투입된 공적자금 중 250억 달러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 정부 지분 36%로 확대
영 국	Northern Rock	2008. 2	· 550억 파운드 공적자금 투입
	B&B	2008. 9	· 500억 파운드의 모기지 금융과 대출자산을 정부가 인수 · 6억 파운드의 자산을 스페인 방코산탄데르에 매각
	HBOS	2009. 1	· 정부 지분 43% · 정부 주도로 로이드에 흡수합병
	스코틀랜드왕립은행 (RBS)	2009. 2	· 정부 지분 90%로 확대 · 3,250억 파운드 규모의 위험자산에 대해 정부 지급보증
	로이드뱅크그룹 (Lloyds Banking Group)	2009. 3	· 2,600억 파운드 규모의 위험자산에 대해 정부 지급보증
독일	코메르츠은행	2009. 1	· 100억 유로 공적자금 투입 · 정부가 지분의 25%+1주 인수
	히포 레알 에스테인드(HRE)	예정	· 정부가 지분의 90% 이상 인수 · 1,020억 유로 공적자금 투입
프랑스	케스 데파르뉴-- 뱅크 포필레르	2009. 2	· 합병은행에 5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우선주 지분 20% 인수 ·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예정
스웨덴	카네기은행	2008. 11	· 투자은행업 허가취소 → 국유화 단행
오스트리아	코유날 크레디트	2008. 11	· 부실자산 인수 대가로 지분 99.78%를 2유로에 매입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티스	2008. 9	· 베네룩스 3국은 164억 유로의 공적자금 투입
덴마크	로스킬데	2008. 7	· 1억5,700만 달러 공적자금 투입
카자흐스탄	BTA	2009. 2	· 국부펀드를 통해 20억7,000만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지분 78% 인수
	알리안스 बैं크	2009. 2	· 국부펀드를 통해 지분 76% 인수

자료: 각종 보도자료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자국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자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기관 국유화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단행함으로써 이후 다른 국가들의 금융기관 국유화 추세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도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기 위하여 결국 금융기관 국유화 방식을 선택함.
- 독일은 코메르츠은행에 10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2009년 1월 국유화를 단행하였고, 자국 내 2대 모기지 은행인 히포레알에스테이트(HRE)에도 1,020억 유로의 정부융자 및 지급보증 후 국유화 단계를 밟을 예정임.
- 프랑스는 합병은행 케이스 데파르뉴-뱅크 포필레르에 50억 유로를 투입하여 우선주 지분 20%를 인수함으로써 국유화를 단행하였는데 이 우선주도 조만간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임.
- 이 밖에 스웨덴(카네기은행), 오스트리아(코뮤날 크레디트), 벨기에-네덜란드(포르티스), 덴마크(로스킬데), 카자흐스탄(BTA, 알리안스 뱅크), 아일랜드(Anglo Irish Bank), 아이슬란드(카우프싱, 란즈방키, 그리트니르) 등의 국가들도 자국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국유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음.

나. 조건부 금융기관 지원

- 일부 국가에서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국내대출 확대, 자국 산업 보호,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법안을 마련하고 정치적 압력을 사용하기도 함.
 -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자국 내 대출 확대를 종용하는 동시에 자국민의 일자리 보존·창출을 위한 각종 법안을 추진 중에 있음.
 - 영국은 자국 자동차업체에 23억 파운드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이주근로자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점수이민제를 도입하였으며, 정유 및 에너지산업 근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외국인 고용 금지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 프랑스는 르노(Renault)와 푸조(Peugeot)에 대해 6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아웃소싱 및 자국 근로자들의 해고를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 밖에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고속철도, 원자력 발전 분야 등에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함.
 - 스페인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귀국을 조건으로 4만 달러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

<표 3> 선진국의 조건부 금융지원 실태

국 가	자국 산업 보호 내용
미 국	· Citigroup은 45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받은 후 미국 내에 365억 달러 대출 실시
	· BoA의 CEO인 케네스 루이스가 미국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천명
	·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은행 및 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법안
	· 자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SOC 투자 프로젝트에만 구제금융 지원하는 법안
영 국	· 자국 자동차업체에 공적자금 투입
	· 점수이민제 도입
	· 정유 및 에너지 산업에 외국인 고용금지 제도 검토
프랑스	· 르노와 푸조에 60억 유로 공적자금 투입 후 아웃소싱 및 자국 근로자 해고금지 조건 제시
	·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 구제금융 지원
스페인	· 이주노동자에게 귀국 조건으로 실업급여 지급

자료: 각종 보도자료

다.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선진국의 해외자금시장 장악

□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재정적자 보전과 경기부양책 재원마련을 위해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국채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선진국 국채 매입 선호로 달러수요를 급증시키고 투자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신흥국들의 해외자금 차입을 어렵게 할 것임.

<표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국채발행 현황 및 계획

국 가	발행일자 및 발행계획	발행 금액 및 내용
미 국	2009	· 총 2조 달러의 국채발행 추진 중
	2009. 3. 25	· 340억 달러의 5년 만기 국채 발행 · 낙찰금리 1.85%
	2009. 3. 26	· 7년 만기 국채발행 예정
독 일	2009	· 총 3,460억 유로의 국채발행 예정 · 2009년 들어 두 차례 국채경매 유찰 경험
	2009. 3. 25	· 57억 유로의 5년 만기 국채 발행 · 국채수요는 저조
영 국	2008과 2009	· 각각 총 1,464억 파운드, 1,479억 파운드의 국채발행 예정
	2008. 3. 25	· 17억5,000만 파운드의 40년 만기 국채 경매에서 입찰액이 1억 파운드 부족하여 유찰
일 본	미 정	· 외국계 국부펀드가 일본 국채 매입 시 이자소득세 감면 추진 · 무이자 국채 발행 주장 제기

자료: 각종 보도자료

- 미국은 올해 재정적자 보전과 경기부양을 위하여 2조 달러 규모의 국채발행을 단행할 것으로 보임.
- 독일은 2009년에 3,460억 유로에 해당하는 국채를 판매할 계획인데 이는 작년보다 57% 늘어난 수준임.
- 영국은 2008년에 1,464억 파운드, 2009년에 1,479억 파운드의 국채발행을 단행할 계획임.
- 2008년 말 기준 846조7,000억 엔의 국가채무를 지고 있는 일본도 경기부양 재원마련을 위해 11조2,000억 엔 규모의 국채발행을 계획 중에 있음.
- 중국의 경우 2008년 1,100억 위안의 재정적자에 이어 2009년에도 9,500억 위안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국채 발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 밖에도 아일랜드는 200억 유로의 국채, 브라질은 10억 달러의 10년 만기 국채, 콜롬비아는 10년 만기 달러화표시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
- 지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국채발행 총액은 올해 약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준임.

3. 금융보호주의의 부작용

가. 보호무역주의 초래

□ 금융기관의 국내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시작된 금융보호주의 경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 및 여타 부문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과거 주식시장 붕괴로 촉발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선진 각국은 자국 산업 및 경제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관세¹⁾를 높게 책정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바 있음.
- 그 결과 미국의 경우 대외 수출량이 1929년 52억 달러에서 1933년 17억 달러로 감소하였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수준 하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기 기간 수출량 감소폭은 50%를 상회함.
- 특히, 농산품 수출의 급감으로 미국 농민들의 지방은행에 대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소규모 지방은행의 파산을 야기하여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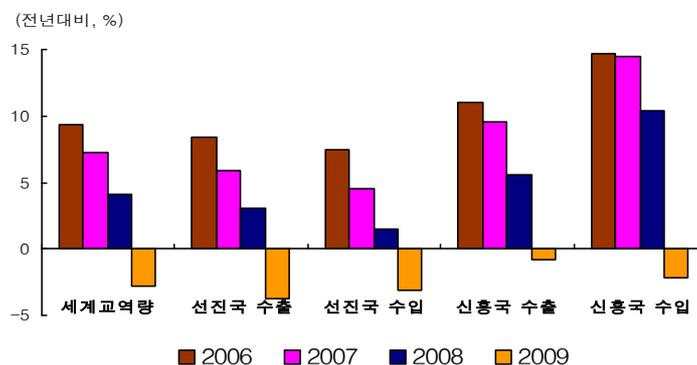
1) 1921~1925년의 평균 관세율은 약 25.9%였으나 1931~1935년의 평균 관세율은 50% 수준에 육박함.

- 현재 금융보호주의를 제재할 국제 규정이나 이를 통제할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보호주의가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 경우 과거 대공황 시절의 보호무역주의보다 그 파급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향후 세계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금융보호주의 심화로 보호무역주의가 재현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이 감소하고 국가 간 교역이 위축되어 세계경제의 조속한 위기극복이라는 당면과제 달성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나. 실물거래 위축에 따른 전 세계 동반 경기침체 가능성

- 금융보호주의로 인해 국가 간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국제무역 위축에 따른 교역량 급감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과거 1930년대와 같이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되는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음.
- 금융보호주의의 영향으로 신흥국가로의 자금유입이 감소하게 되면 이들 국가는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할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선진국 수출 수요 감소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이는 다시 선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진국에서 경기침체 장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 과정을 통하여 전세계 동반 경기침체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보호주의가 동반 경기침체 현상을 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 교역량 급감, 자본이동 제한 등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크게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여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가들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임.

<그림 1> 세계 교역량 변동 추이



자료: IMF

다. 신흥국 외환사정 악화 가능성

- 한국처럼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높은 신흥국가들이 금융보호주의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투기자본의 집중적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외환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들이 신흥국가에 투자된 자금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여 급속히 회수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에 대한 신규대출을 크게 축소하는 바람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극심한 환율변동을 경험한 바 있음.
 - 동유럽 국가들처럼 해외차입이나 외국인직접투자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가 재정도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신흥국가들은 선진국의 금융보호주의 성향이 장기화될 경우 외환시장에 심각한 혼란뿐만 아니라 국가부도 가능성에 직면할 수도 있음.
- 한편, 중국처럼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일부 신흥국들이 미국처럼 재정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신흥국들이 금융보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선진국의 국채를 일시에 매각한 후 자본회수에 나선다면 선진국 역시 극도의 금융시장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 특히, 신흥국들이 선진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한다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선진국의 저금리정책 및 경기부양책이 무력화될 수도 있음.

4. 금융보호주의 타개 해법과 관련 문제점

가.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

- IMF 등 국제기구의 권한을 강화한 뒤 이들 기구를 통하여 금융보호주의로 발생한 국가 간 금융분쟁 등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함.
 - 현재 관세, 쿼터 등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무역분쟁에는 WTO가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나, 국가 간 금융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IMF 등 국제기구의 권한을 확대하여 금융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IMF 등 국제기구가 감독당국 회합인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²⁾ 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금융분쟁 발생시 공동으로 개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화포럼(FSF)은 모든 G20국가를 포함한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하기로 함.

□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국제적 금융분쟁을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임.

- 미국의 의결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MF의 경우 미국 자체가 금융분쟁의 대상이 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도 있음.
- 또한 경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강한 국가들의 경우 IMF 등 국제기구의 조언이 자국의 이익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이를 무시하여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협약 등을 통하여 국제기구의 위상을 제고하지 않는 이상 이들 조직의 권한 강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국가 간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 국가 간 공조를 통하여 금융보호주의를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별 국가에 득이 되는 전략일 것임.

- 지난 4월 초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보호주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하고, 모든 참석국들이 다음 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 보호주의 관련 조치의 신설금지를 위반한 국가가 존재할 경우 WTO는 해당 국가와 위반 사례를 분기별로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함.
 -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무역 및 투자 증진에 힘씀.
 - 향후 2년간 각국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의 규모를 2,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함.
 - 또한 지난 해 7월 결렬되었던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의 타결을 위하여 노력함.
- 그러나 향후 국가 간 협의를 통하여 세부 시행방안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금융보호주의 배제를 위한 국가 간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국가들이 대외적으로는 금융보호주의 배제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금융보호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 또한 국제 협약에 의해 금융보호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기존에 이미 실행된 금융보호주의 조치들에 대해 소급하여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 점 역시 개별 국가들의 이탈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것임.

다.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

- 국제적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를 통하여 은행들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행위들을 제어할 수 있다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대출이 확대되어 금융보호주의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과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G20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금융규제와 금융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음.
 - 그러던 중 금융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적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함.
- 국제적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상당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즉각적인 금융보호주의 타개 조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름.

라. 바이 로컬(buy local) 조항의 제한

- 최근 개별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 및 기업들에 대하여 규제금융을 지원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국민 대출 확대, 국내산 원자재의 사용, 자국민 고용 등의 단서를 다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적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바이 로컬 조항을 제한함으로써 금융보호주의의 효과를 누그러뜨릴 수 있음.
- 그러나 바이 로컬 조항을 국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 종합대책에 대한 하원 승인을 민주당의 지지만을 통해 얻어냈는데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강제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조항에 찬성하고 있음.

5. 한국의 대응방안

가. 국제사회에서 금융보호주의 배제 주장

- 한국은 G20 정상회의 등에서 여타 신흥국가들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뒤 이들과 함께 금융보호주의 일소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선진국의 금융보호주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흥국들은 범세계적으로 목소리를 통일한 뒤 국제사회에서 금융보호주의 배제를 일관되게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신흥국가들은 금융보호주의를 채택해서 득을 보기 보다는 선진국의 금융보호주의로 인한 실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금융보호주의 방지를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함.
 - 다수의 선진국들이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금융보호주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보호주의를 채택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도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필요할 경우 국내경제 보호를 고려해 볼 만함.

나. 주변국과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안정적 자금 조달처 확보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선진국의 금융보호주의 영향으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해외에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교류채널을 형성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최근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안정적 자금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넘어 외환위기로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2008년 9월과 2009년 3월에 금융위기설이 발생하였으나 한미·한일·한중 통화스왑 협정 체결 및 이의 연장, 한중일+ASEAN으로 구성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간 공동기금 조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금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시장에 큰 혼란 없이 사태를 무마할 수 있었음.

다. 경제 펀더멘털 강화

- 한국은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 정비,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의 금융보호주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는 데는 과거에 비해 훨씬 잘 정비된 금융시스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천명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타파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근본적인 대비책은 대내외적으로 유망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
KiRi.